

大學社會의 道德性的의 문제

孫 東 鉉

(成均館大 哲學科)

1. 大學의 道德性에 대한 社會的 要求

대학 사회의 도덕성에 대한 일반의 懷疑 내지 불신이 근자에 들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대학 운영의 非理에 대한 의혹의 눈길이 입시 부정을 둘러싸고 발생한 최근의 불미스러운 사태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실망과 분노로까지 이어진 때문인 듯하다. 사법적 조처까지 감수해야 했던 不正의 사례가 비록 몇몇 대학에 국한되어 드러나기는 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몇 안 되는 양심 집단의 하나로 여겨져 온 대학 사회가 마침내 그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대학의 내부적 문제로 인해서라 하더라도, 대학이 일반 국민의 도덕적 신뢰를 잃는다면 대학의 사회에 대한 비판과 先導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절기 어려워지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될 때 이는 그저 대학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근래 추진되어 온 대학의 자율화가 대학의 부도덕화를 초래했다는 일부의 견해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 전반이 그러하듯 대학 사회도 민주화의 변화기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 저

불상사가 발생했다 해서 자율화와 부도덕화를 同軌로 이해하여 자율화의 유보를 고려한다면, 이는 사태의 구조적 연관을 깊이 보지 못한 피상적인 판단에서 오는 오류이다. 저 不正의 사례는 오히려 대학 본래의 자율성이 위축된 가운데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구조적 병폐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더 근본적인 반성을 요하는 것이요, 사실 대학 사회의 도덕성의 문제는 입시 부정 등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대학에서의 도덕성의 문제는 거시적으로 보면, 근원적으로 대학의 이념에서부터 연원하는 문제이다. 이른바 ‘상아탑’이라는 이름 아래 환동안 대학은 한편으로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치외법권적’ 특권 아래 그 독립성·자율성을 누리는 동시에, 다른 한편 정치사회적 현실에 대해 불간섭의 초탈한 자세를 취하는 것을 그 본연의 모습으로 자임했던 시대가 있었다. 프러시아 제정 시대 훔볼트대학의 설립 이념에서 엿볼 수 있는 이러한 대학의 이념은 사실 오늘날 우리의 대학 사회에도 어느 정도 그 전통이 온존되고 있다. 이러한 ‘상아탑’의 이념이 대학을 지배하던 시대에는 대학의 도덕성의 문제도 대학 내적인 학문 탐구에서의 도덕성의 문제로 국한되었을 것이다. 즉 대학인 각자의 학문적 성실성이나 인격적 품성 등의 문제가 대학의 도덕성의 문제를 이루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대학은 더 이상 이러한 '상아탑'의 이념에 매달려 있지 않다. 우리의 대학 현실로부터 구미 각국의 대학 사회로 눈을 돌려 보아도 대학이 정치사회적 현실로부터 遊離되어 있는 예는 찾아 보기 어렵다. 오히려 대학의 진정한 도덕성이란 곧 지식인 집단의 對사회적 도덕성의 문제라고 여겨질 만큼 대학과 사회 현실이 긴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다. 학문 탐구라는 본래의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자율성과 독립성을 견지하되, 현실의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참여의 활동 또한 기피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대학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자세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도덕성의 문제는 대학의 학내적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는 것이다.

2. 大學의 道德性的의 要件

대학 사회의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러하다면 대학은 어떠한 자세를 통해 그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가? 대학으로 하여금 '시대의 지성'으로서 사회적인 비판과 선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도덕적 권위'를 갖기 위해 대학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대학의 어떤 자세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대학의 목소리'에 승복하고 이를 따르게 하겠는가?

첫째 요건으로 우리는 대학의 자율성, 즉 大學人의 自律的 姿勢를 들 수 있다. 외부적인 압력이나 유혹에 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성적인 사려에 의거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 대학은 사회에 대해 도덕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설득력을 갖고 또한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압력일지라도 일단 그것이 대학을 타율적 존재로 만들게 되면, 이는 어김없이 국민에 의해 감지되고 대학의 목소리는 그 내용에 상관없이 더 이상 정당한 것으로 경청되지 않는다.

둘째로는 대학의 不偏不黨性을 들 수 있다. 대학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경우에 따라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그것은 어디까지나 正義의 이름 아래 민족과 국가

의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어야지, 사회 속의 특정 정파나 진영 또는 계층의 편에 서서 그것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대학인의 비판적 언행은 바로 이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존의 어느 이익 집단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大學人의 純粹性을 들 수 있다. 사회 문제에 대한 대학인의 비판적 언행은 어떤 보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촉구할 뿐이어야지, 이러한 비판적 활동 자체에 대한 반대 급부를 요구하거나, 또 제기된 문제의 해결을 통해 대학인 자신의 이익을 도모코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본래의 균형형을 주장한다 할 때, 이것이 대학인의 이익의 증대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독재 정권의 비민주성을 규탄한다 할 때, 이것이 대학인 스스로 정권을 담당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직접적인 이해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사태를 바라 볼 때 대국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냉정하고도 긴 안목으로 바로 파악할 수 있거나 대학인은 바로 이러한 순수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자율성·불편부당성·순수성—이는 곧 知性의 本性이기도 하다. 지성이 이러한 요건을 소홀히 한다면 온전한 학문적 탐구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학문적 탐구와 이의 전수를 본래 과제로 삼는 대학 사회가 저와 같은 요건을 그 자세에 갖추지 않으면서만 그의 부차적 과제라 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비판과 선도에 요구되는 도덕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동안 대학 사회의 비판적 주장과 활동이 일반 국민의 보편적 지지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대학인의 이러한 지성적 자세 때문이었다고 하겠다. 대학인의 사회 진단과 방향 제시가 언제나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그 비판과 주장의 내용에 앞서 그 비판하는 자세가 일반 국민으로부터 도덕적 인준을 받을 때 대학은 그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 요건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하겠다.

3. 道徳性 문제의 性格

이렇듯 대학의 도덕성의 문제는 대학에 주어지는 다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대학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도덕성과 관련이 되겠지만, 어느 문제도 그 자체로는 '대학'이라는 公的 실체의 도덕적 문제로 구체화되기 어렵고, 따라서 도덕성의 문제는 다른 문제로 호도되기 쉽다.

앞에서도 대학인의 '자세'라는 표현으로써 도덕성의 문제의 성격에 대해 암시한 바 있지만, 우리는 대학의 도덕성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그 성격 규명을 해 보고자 한다.

첫째, 도덕성의 문제는 업적 성취의 문제와는 엄격히 구별된다. 대학이 연구 및 교육에 있어 얼마만한 학문적 업적을 성취해 내느냐 또는 이를 통해 사회에 대해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대학 사회의 도덕성의 문제와는 무관한 것이다. 물론 대학 사회가 도덕적으로 건전할 때 저와 같은 학문적 성과나 사회적 기여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겠으나, 그렇다고 '도덕성'이 업적 성취의 양으로 환원되어 측정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도덕성의 문제는 대학 운영의 '현실적인' 목표나 지표와도 직접적으로는 무관한 문제다. 대학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육성·발전시키느냐 하는 문제도 결국은 대학이 어떤 업적을 성취해 내느냐 하는 문제로 귀착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 사회에서의 도덕성의 문제는 대학의 구조나 운영에 관한 제도적 장치의 문제와도 구별된다. 대학마다 학칙이 있고 경우에 따라 정관 등 여러 법규적 틀이 있겠지만, 이러한 규정의 내용 자체는 도덕적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경우에 따라 그 규정 내용이 대학 사회의 도덕성을 보존·강화하는 데 유리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위협하기 쉽도록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내용 자체가 도덕성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재정 문제, 인사 문제, 학사 문제 등 제도적 장치에 관한 법규는 실은 대학이 그 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

는 기능적이고 방법적인 성격의 것이라 하겠다.

도덕성의 문제는 이렇듯 대학 사회가 수행하는 구체적 활동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수행의 정신적 자세에 관련된 문제요, 대학 사회를 틀지워 주는 의적인 법규적·제도적 장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정하고 운영하는 주체적 동기와 지향에 관련된 문제다. 대학은 보편적 가치의 추구를 그 이념으로 삼고 있거니와 이 보편적 가치에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사회적인 삶의 의의와 목적을 제시해 주는 도덕적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만큼 대학은 그 이념상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 도덕적 주체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 사회가 유리한 물질적·제도적 여건 아래서 기능적으로 높은 학문적·사회적 업적을 성취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대학 사회의 도덕성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니다. 대학의 도덕성의 문제는 대학의 이념에 연관되는 원칙과 원리의 문제요, 따라서 절충되거나 타협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가감·조정될 수 있는 것은 원리 자체가 아니라 원리의 실현 내지 적용의 범위나 방법에 관해서일 따름이다. 이런 의미에서 도덕성의 문제는 절차에 있어서의 '형식적 정당성'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원리와 원칙의 문제인 만큼 도덕성의 문제는 대학 사회에 있어서도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숙고와 반성을 선결 요건으로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주어짐으로써만 도덕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도덕성의 문제가 먼저 확고한 방향에서 정리됨으로써 이를 정초로 하여 다른 모든 방법적이고 기능적인 문제가 그 해결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道徳성을 위협하는 要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날 대학내에서 대학의 도덕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나아가 대학의 도덕성의 회복을 위해 무엇이 요구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

대학이 사회 일반을 떠나서 존립할 수 없는 이상 대학의 도덕성의 문제도 사회 일반의 도덕성

의 문제와 관련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사회의 영향이 대학 사회에서는 대학에 고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대학 사회에 국한시켜 오늘날 대학의 도덕성을 위협하는 경향을 대학인 자신 속에서 찾아 보기로 한다. 그리고 '대학 사회'가 총체로서는 하나의 공동체이지만, 그 안에는 몇몇 서로 혼동되거나 교체될 수 없는 구성 요소가 그 기능·역할·위상을 달리 하며 서로 다른 성향을 띠고 있으므로, 이 구성 요소들, 즉 학생·교수·직원·대학 운영 당국·재단 또는 문교 당국 등을 구분하여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대학의 도덕성을 내면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인으로서, 첫째로 우리는 문교 당국이나 대학 당국의 權威主義的 行政을 들 수 있다. 도덕적 건강은 어디까지나 자율성과 자발성에 기초하는 것인데, 대학 행정에서의 上命下達式의 권위주의적 발달 및 행태는 외면적인 추종은 가능하게 하지만 내면적인 승복의 분위기를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다. 최근 이러한 경향이 크게 개선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문교 당국이나 대학 본부의 행정 책임자가 그 능력과 성실성을 토대로 마땅히 지녀야 할 참된 권위를 가질 때 대학인은 이에 대해 승복하는 자세를 취할 것이요, 이렇으로써만 대학의 도덕성에 역행하는 권위주의는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문교 당국의 政治權力에 대한 自律性이 確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사립대학의 운영 주체라 할 수 있는 學校財團의 商業主義的 傾向을 들 수 있다. 해방 후 우리나라의 사립대학들은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른 활동을 통해 축적된 재산을 교육문화 사업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설립되었다기보다는 학술과 교육의 목표로 대학을 설립했다 하더라도 그 운영의 재정적 부담을 대학 자체가 져야 하는 형편에 있었으므로 대학 운영 자체가 기업 경영의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 최악의 경우 기업 활동의 한 방도로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예도 아주 없었다고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기업 활동의 본질적인 속성인 이익 추구의 상업주의가 대학 사회에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이념 및

과제와 병립할 수 없는 상업주의가 대학 재정의 부실 및 파행적·편법적 운영을 야기시킴으로써 대학이 그 본래의 과제를 온전히 수행해 낼 수 없게 했던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대학 재정의 불건강이야말로 대학 사회의 도덕성을 위협하는 가장 실질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을 최근의 불상사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하겠다.

셋째로 대학의 행정 책임자 및 행정 사무 직원들의 官僚主義的·便宜主義的 業務 姿勢 또한 대학의 도덕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대학이 새롭고 다양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뿐 아니라 지적 탐구와 반성을 통해 이를 先導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학 운영의 방향 설정 및 사무적 지원 또한 구습에 매달려 편의와 안일을 도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새로운 변화가 가치관·세계관의 새로운 지평을 요구해 올 때 대학의 행정이 이를 가로막는다면, 이는 그 자체가 불성실의 부도덕일 뿐 아니라 대학 사회가 그 도덕적 과제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장애이기도 하다.

넷째로 傍觀主義·世俗主義·獨善主義·派閥主義 등 교수들이 빠지기 쉬운 이 그릇된 자세는 대학의 도덕성을 실추시키는 가장 중대한 요인이라 하겠다. 자신을 '상아탑'의 주인으로 생각해 모든 사회적 현실로부터 연구실 안으로 도피하여 대학 내·외의 문제를 외면하는 방관주의, 연구와 교육이라는 교수 본래의 과제에 충실하려 하기보다는 대학 내·외의 직책이나 또는 다른 활동을 통해 소시민적 자기 이익을 도모하려 하거나 세류에 편승하여 대중으로부터의 인기나 명예를 얻고자 급급하는 세속주의, 학술적인 활동이나 대학내의 학사에 관한 문제의 처리에 있어 학생이나 주변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자기 주장만을 내세워 그릇된 권위를 지키려는 독선주의, 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學緣·地緣 등을 매개로 무리를 지음으로써 학계나 대학내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파벌주의……. 교수들 사이에 이러한 경향이 심화된다면, 바로 그만큼 대학의 도덕성은 훼손될 것이다. 교수들의 자세는 실로 대학의 도덕성을 직접 나타내 보이는 바로메터요,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경향이 외부에 드러날 때 대학의 도덕성에 대한 일반의 불신은 심각한 정

도에 이른다 하겠다.

다섯째로 근래 대학의 학내 문제에서 학생들의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학생들의 理想的인 獨斷主義도 대학의 도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도덕성의 문제에 있어 대학 구성원 중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높은 도덕성을 견지해 온 것은 학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 학생 운동이 정치적 투쟁의 한 부문 내지 한 방도로 변모되는 가운데, 이에 열중하는 학생들이 보여주는 이념적 독단성은 왕왕 대학인으로서의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경향을 띠기도 한다. 목적이 정당하면 이의 실현을 위한 수단도 바로 그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는 속단이 과격하고도 극단적인 행동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생각되거나, 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 또한 경직된 교조적 태도에서 나온 독단이라면, 이는 실로 도덕성을 위협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5. 道徳性 回復을 위한 原理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을 극복하고 앞에서 언급된 자율성·불편부당성·순수성을 견지할 수 있을 때, 진부한 표현으로 말해 오직 眞理와 正義만을 주창할 수 있을 때, 대학은 그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학은 일반의 도덕적 신뢰를 전폭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돈과 권력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서 오직 스스로의 知性的인 思慮에 의해서만 자신의 말과 행동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어느 편으로도 치우치지 않음으로써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정의롭게 도모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이렇게 함에 있어 냉정한 이성적 사려를 위협하는 자기 이익에 대해 초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학이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처방을 제시하기 어렵다. 문제되는 상황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러한 노력이 쫓아야 할 원리는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원리로서 우리는 첫째로 公開의 원칙을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명분과 합리성으로 호도되어 감추어져 있는 대학 내·외의 모든 실제적인 현실이 명백하게 대학인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울여지는 모든 속고와 행동이 또한 모든 대학인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가 무엇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선택되는 방도가 무엇인지 공개됨으로써 대학인은 모두 그 서로 다른 위상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公正하고도 客觀的인 태도를 견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우리는 명분과 실질, 관념의 체계와 행동의 체계, 내적 의도와 외적 행동 사이의 일치를 도모할 一致의 원칙을 제시한다. 도덕성의 근본이 정직에 있다면, 이러한 ‘二重化’의 구조가 해소될 때에 대학인의 언행은 도덕성의 기초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공개의 원칙과 일치의 원칙은 상호 의존적인 것으로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일치’의 원칙이 지켜져야만 ‘공개’도 가능해지며,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일치’ 여부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두 원칙을 통해 우리는 대학의 불편부당하고도 순수한 자세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원칙은 우리가 셋째로 제시코자 하는 參與의 원칙을 동반할 때만 그 의의를 갖는다. 아니, 대학의 구성원 모두가 학내·외의 문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참여의 원칙은 저 두 원칙의 전제라고도 할 수 있다. 참여의 길이 막혀 있을 때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자세는 위축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인 모두가 ‘이중화’로 왜곡되지 않은 현실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된 절차를 밟을 때, 대학은 그 사회적 도덕성의 기초를 확보할 것이요, 일반의 도덕적 신뢰는 이에 뒤따라 자연스럽게 구축될 것이다. *